

No. 2

2012. 07 재정동향



목

재 정 동 향

차

I. 국제기구	2
II. 호주 (Australia)	7
III. 캐나다 (Canada)	8
IV. 프랑스 (France)	9
V. 독일 (Germany)	11
VI. 그리스 (Greece)	12
VII. 아일랜드 (Ireland)	13
VIII. 이탈리아 (Italy)	15
IX. 일본 (Japan)	17
X. 포르투갈 (Portugal)	19
XI. 스페인 (Spain)	20
XII. 영국 (UK)	22
XIII. 미국 (US)	25

요 약

- 2012년 7월 상반기 국제기구(EU, IMF, OECD)와 주요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국제기구 동향
 - EU는 정상회의를 통해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으며, 스페인 정부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 및 긴축안 의결
-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2년 72억유로, 2013년 61억유로의 세입 증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2차 수정예산안(PLFR 2012)을 발표함.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
- 독일은 새로운 2012~2016 중기 전망을 발표함. 또한 하원에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을 비준하고,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을 승인함
- 이탈리아와 일본은 FY2011 결산 보고서를 발표함
- 영국은 FY2010-11 결산요약보고서를 발표함
- 스페인 총리는 하원에서 최근 유럽의회(European Council)에서 합의된 재정목표 및 개혁 이행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개혁 및 긴축방안을 발표함. 부가가치세 인상,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총 650억유로 추가 긴축을 추진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1 EU

■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U 정상회의 내용 구체화(2012. 7. 9~10)

○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¹⁾

- 7월 말까지 은행권에 1차 구제금융 300억유로 지원
-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조건은 20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임

○ 스페인 정부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 및 긴축안 의결

-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 및 최종감축시한 연장²⁾
 - 유로그룹은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GDP 대비 5.3%에서 6.3%로 완화하고 2013년 4.5%, 2014년 2.8%로 조정, 감축시한은 2014년 말로 1년 연장함
- 스페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2014년까지 세금인상과 공공부문 지출 삭감 등을 통한 650억유로의 재정긴축안을 의결(2012. 7. 13)

○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본드 시범 발행에 합의함³⁾

- (내용) 교통·에너지·정보기술(IT) 등 핵심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부양이 목적
- (규모)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프로젝트에 향후 2년간 45억유로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시범 발행안 승인
 - EU 집행위원회는 2012~2013년 회계연도 예산 중 2억 3천만유로를 투입
 - * 수송·교통 분야 2억유로, 정보통신 분야 2천만유로, 에너지 분야 1천만유로 배정

1) 참고: 「Statement by the Eurogroup」, Council of the EU, 2012. 7. 9.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31648.pdf) 및 주요 외신 보도자료

2) 참고: 「Spain is given an extra year to correct its deficit」, Council of the EU, 2012. 7. 10.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31676.pdf)

3) 참고: 「Council approves project bond pilot phase」, Council of the EU, 2012. 7. 10.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31659.pdf)

○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위기 국가에 대한 국채 매입 방안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일부 국가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재원 확대 반대로 합의 실패

- 주요 외신은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유보, 이탈리아의 의회동의 절차 등으로 당초 7월이었던 ESM의 출범이 8월 이후로 지연될 것이라 보도함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인하(2012. 7. 5)⁴⁾

○ ECB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75%로 25bp 인하함⁵⁾

- 유로존 위기 우려 고조, 각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등 유로존의 경기하방압력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임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제 원자재값 하락, 인플레이션 상승세 둔화 등이 금리인하의 원인으로 지적됨

* ECB 총재는 유럽의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2012. 7. 10)

4) 참고: ECB 보도자료, ECB, 2012. 7. 5. (<http://www.ecb.europa.eu/press/pr/date/2012/html/pr120705.en.html>)

5) ECB는 기준금리인 채용자금리와 함께 최저대출금리는 1.5%, 예금금리는 0.0%로 각각 25bp씩 인하함

2 IMF

- 「2012년 IMF의 미국에 대한 경제 정책 자문결과」 발표(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12 Article IV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V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12. 7. 3)
 - (재정정책) 유로존의 금융위기와 재정절벽(fiscal cliff)⁶⁾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하방위험에 노출
 - 이런 배경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회복 과제를 대처할 정책들이 필요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회복시키는 중기 계획을 채택하기 위해 경기회복을 부양하는 단기의 재정 조정 속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
 - 채무 확대 억제 정책으로서 중기적으로 세수 확충과 급부금(benefits) 제도 개혁, 현재단계에서는 성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시의 적절하게 조절 가능하며 경제전망이 악화될 때를 대비하여 양적완화의 여지가 충분함
 - 양적 완화 이외에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연방준비제도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함으로써 장기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
 - 경기부양의 추가적인 효과적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⁷⁾ 효과적 매입을 언급

6)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7) MBS(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

3 OECD

□ 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 발표(2012. 7. 9)

○ OECD 회원국 전체를 기준으로 본 2012년 5월 경기선행지수는 100.3을 기록. 이는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약화를 시사

- 미국과 일본 등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2달 연속 100을 상회하고 있음
- 캐나다와 영국 등은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0.2 떨어진 98.9를 기록하며 경기침체의 부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경기선행종합지수 추이

Month	2012.1	2	3	4	5	전월비(p)	전년 동월비(p)	경기전망
OECD 전체	100.3	100.4	100.4	100.4	100.3	-0.1	-0.5	경제성장 둔화
G7개국 ¹⁾	100.5	100.6	100.6	100.5	100.4	-0.1	-0.5	
유로지역	99.7	99.7	99.6	99.6	99.6	-0.1	-1.7	
아시아 5개국 ²⁾	99.7	99.6	99.5	99.4	99.3	-0.1	-1.1	경기수축 및 침체
미국	101.0	101.1	101.2	101.1	100.9	-0.2	0.2	경제성장 둔화
일본	100.8	100.8	100.9	100.8	100.7	-0.1	0.2	
스페인	100.8	100.8	100.8	100.9	100.9	0.0	0.6	
아일랜드	100.9	101.1	101.3	101.5	101.6	0.1	1.3	경기확장
한국	99.4	99.6	99.9	100.1	100.4	0.2	0.3	경기회복
호주	99.6	99.5	99.5	99.5	99.6	0.1	-0.9	
그리스	98.5	98.5	98.6	98.7	98.8	0.1	-0.4	
포르투갈	98.0	97.8	97.8	97.8	97.8	0.1	-3.7	경기수축 및 침체
캐나다	99.8	99.8	99.8	99.8	99.7	-0.1	-0.8	
영국	99.5	99.6	99.7	99.7	99.7	0.0	-1.6	
독일	99.4	99.5	99.5	99.5	99.4	-0.1	-2.5	
프랑스	99.8	99.7	99.6	99.6	99.6	0.0	-1.3	
이탈리아	99.6	99.4	99.2	99.0	98.9	-0.2	-2.8	

주: 1)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2)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 포함

1. 장기추세치 = 100

OECD는 CLIs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순환국면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① CLIs가 100을 상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확장(expansion), ② CLIs가 100을 상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후퇴·하강(downturn), ③ CLIs가 100을 하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수축·침체(slowdown), ④ CLIs가 100을 하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회복(recovery) 등으로 평가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EI_CLI)

■ 『Employment Outlook 2012』 발표(2012.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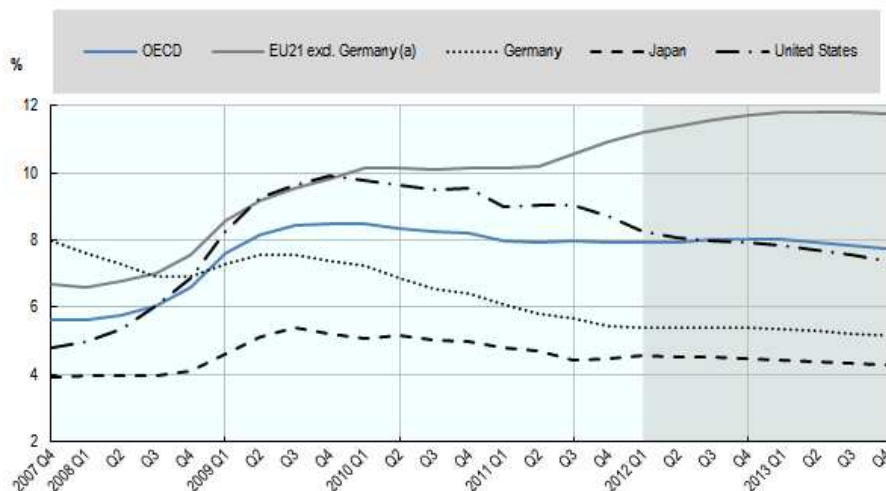
○ 2012년 5월 실업률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1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5월에는 11.1%로 최고치 기록
- 미국은 8.2%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나 스페인은 24.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등도 두 자리 수치로 나타남

○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 전망

- 현재의 취약한 경제회복 상황으로 인해 2013년 4사분기 실업률은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5월의 7.9%와 비슷한 수준

[그림 1] 실업률 추이 및 전망치



주: 음영 부분은 OECD의 실업률 전망치이며 (a)는 가중합을 의미함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p. 91을 근거로 한 OECD의 추정

○ 기타 주요사항

-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 무기계약직(open-ended contracts) 채용보다는 임시계약직(temporary contracts) 채용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과 저숙련 근로자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EU의 장기실업 비중은 평균 약 44%로 가장 높으며 미국 또한 30%로 상승하고 있어 장기실업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필요
-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노력이 필요



호 주

1 예산 · 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V

프랑스

1 예산·결산 등

■ 2012년 2차 수정예산안 발표(2012. 7. 4)

-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2년 72억유로, 2013년 61억유로의 세입 증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2차 수정예산안(PLFR 2012⁸⁾)을 발표함
 - 또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에는 4.5%, 2013년에는 3%로 낮추고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13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 원유회사에 대한 과세, 투자관련 세금감면조치 종료, 금융거래세율 2배 인상 등을 추진함
- 또한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철회하고, 대통령 및 장관들의 임금을 3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됨

<표 2> FY2012 2차수정예산안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전망치	0.3	1.2	2.4	2.4	2.4	2.4
재정적자 목표치	-4.5	-3.0	-2.25	-1.5	-0.75	0
공공 지출	56.2	56.1	55.4	54.8	54.1	53.4
평균 세율	45.0	46.2	46.3	46.4	46.5	46.5
공공 부채	89.7	90.6	89.9	88.1	85.5	82.4

출처: 프랑스 재무부, 2012년 2차 수정예산안

■ 2013년 예산 및 2013~2015년 중기재정계획 지침 발표(2012. 7. 10)

- 프랑스의 아이로(Jean-Marc Ayrault) 총리는 각 정부 부처에 2013년 예산 및 2013~

8)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LFR 2012

2015년 중기재정계획(du budget pluriannuel 2013~2015) 지침을 전달함

- 성장률 둔화와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Recovery in justice"라는 구호 아래 각 부처는 운영비용을 전년 대비 2013년 7%, 2014년 4%, 2015년 4%를 감소시키고, 교육·보안·법무 이외의 분야들은 2.5%의 인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1 예산 · 결산 등

- 독일 재무부, 새로운 2012~2016 중기 전망 제출(2012. 7. 4)⁹⁾
 - 독일 재무부는 새로운 중기 전망(new medium-term projection)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GDP 대비 0.5%로 추정함
 - 이는 2012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German Stability Programme)¹⁰⁾에서 예측한 GDP 대비 1%에 비해 균형예산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정된 전망치는 긍정적인 노동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경제 발전에 기인함
 - 부채비율(debt ratio)은 2011년 GDP 대비 81.2%에서 2012년 8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효과로 부채비율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독일은 2012년 중기 목표인 GDP 대비 0.5%의 구조적 적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함

2 기 타

- 독일 하원,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 비준 및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 승인(2012. 6. 30)¹¹⁾
 - 독일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긴축과 재정삭감 방안을 담은 신재정협약을 비준
 - 표결에 참가한 608명의 의원 중 3분의 2가 넘는 491명이 찬성
 - 또한, 독일 하원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설립안을 통과시킴
 - 표결에서 493명이 찬성, 106명 반대, 5명 기권으로 ESM 설립안 승인

9) 출처 : 독일 재무부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10) 2012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내용은 재정동향 5월 제1호 참고

11) 출처 : 독일 재무부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VI

그 리 스

1 예산 · 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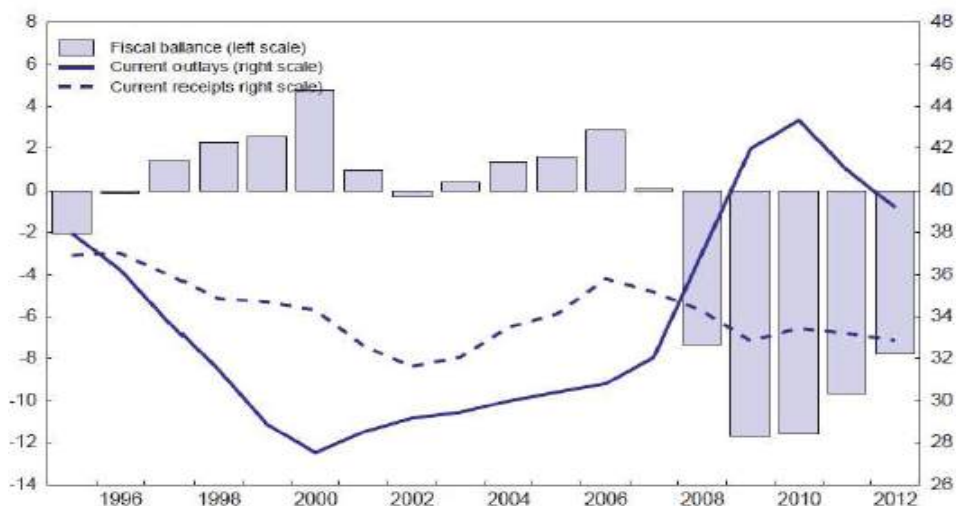
아일랜드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및 경제회복 방안』 보고서 발표(2012. 7. 2.)
 - (현 재정 상황) 공공기관 임금인상 억제 및 공공사회지출 감축 등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적자는 2012년 목표인 GDP 대비 8.6% 내로 달성되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
 - (현 경제 상황) 아일랜드는 경제 위기에도 기업 친화적 환경과 유연한 노동시장 유지 정책을 통한 경제시장의 구조적 강화를 통해 경기회복세로 전환
 - (향후 과제) 수출 주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
- 또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복지지출 증가 및 유로존 경제 침체기에 대비하여 대응 여력 비축할 필요

[그림 2] 아일랜드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Note: Fiscal balance excludes bank support measures of 2.5% of GDP in 2009 and 20.1% of GDP in 2010.

1. Projection for 2011 and 2012.

<표 3> 분야별 정책방안

분야	정책방안
1. 재정건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정부지출 삭감 추진 명목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중기계획 설정
2. 금융시스템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수입 극대화 채무보증 자격요건 강화 및 관리의 엄격한 시행
3. 구조적 실업 증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수준 및 지급기간 감축 적극적 직업훈련 정책 지원
4.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완화 산업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 증진

자료: 아일랜드 재무부,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및 경제회복 방안』, 2012. 7. 2.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III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2011년 이탈리아 결산보고서(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발표 (2012. 6. 28)¹²⁾
 - 정부의 지출효율화 노력으로 2011년 재정수지는 -624억 유로(2010년 -715억 유로)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1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120.1%(2010년 GDP 대비 118.6%)로 증가하였음
 - 재정수지는 2012년 GDP 대비 -2.0%, 2013년 GDP 대비 -1.1%, 공공부채는 2012년 GDP 대비 123.5%, 2013년 GDP 대비 121.8%로 전망함¹³⁾
 - 자산은 8,207억유로(금융성 자산 5,458억유로, 비금융성 자산 2,750억유로)이며, 부채는 2조 3,439억유로임
 - 2011년 12월 31일 기준 부채 잔고는 1조 5,232억유로로 지난해 1조 4,444억유로보다 증가함

<표 4> 2011년 공공재정 결산

(단위: 백만유로, GDP 대비 %)

	2009	2010	2011
Spese (지출)	798,436	795,311	798,565
	52.5	51.2	50.5
Entrate (수입)	715,690	723,854	736,202
	47.1	46.6	46.6
Indebitamento netto (재정수지)	-82,746	-71,457	-62,363
	-5.4	-4.6	-3.9

자료: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1 - Volume I: I conti dello Stato e le politiche di bilancio*

12) 2011년 이탈리아 결산보고서와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의회 심의 중에 있으며, 7월에서 10월 사이에 결산법안이 승인될 예정임

참고: 이탈리아 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 (http://www.corteconti.it/controllo/finanza_pubblica/bilanci_manovra_leggi/rendiconto_generale_2011/)

13) 2012-2015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치보다 완화되었음(2012년 5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표 5> 2011년 자산운영 결산

(단위: 유로)

구분	내역	금액
ATTIVITA' (자산)		820,718,830,156
	Attività finanziarie (금융성 자산)	545,750,175,628
	Attività non finanziarie (비금융성 생산성 자산)	274,968,654,527
PASSIVITA' (부채)	Passività finanziarie (재정부채)	2,343,938,849,420
	Eccedenza passiva al 31 dicembre 2011 (2011년 12월 31일 기준 부채잔고)	1,523,220,019,264

자료: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1*
-Decisione sulla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X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1 결산 개요(전망) 발표(2012. 7. 2)

- FY 2011 결산의 세입 증감액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 금액은 2조 2,072억엔으로 세입 증감액은 △7,439억엔, 세출 불용액은 2조 9,512억엔 규모
- 승인여금 계산상 공제 금액(2,282억엔)과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1·2호) 관련 잉여금(7,489억엔)을 모두 차감한 금액은 1조 2,301억엔 수준

<표 6> FY2011 결산 개요 내역(전망)

(단위: 억엔)		
구 분	금 액	비 고
1. 세입 증감액	△7,439	
(1) 세수	8,026	결산전망액
(2) 세외수입	2,534	428,326
주요내역		
일본은행납부금	2,164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1·2호)	△423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3호)	△107	
(3) 공채금	△18,000	결산전망액
건설공채	△0	(부흥채 제외)
특례공채	△15,000	427,979
부흥공채	△3,000	
2. 세출 불용액	29,512	
주요내역		
국채비	6,411	
예비비	2,751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1·2호)	7,912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3호)	3,143	
3. 합 계	22,072	(1 + 2)
4. 승인여금 계산상 공제 금액	2,282	
(1)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재원	2,246	
(2)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회계의 이월재원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3호))	35	
5.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1·2호) 관련 잉여금	7,489	
6. 차 감	12,301	(3 - 4 - 5)

주: 1. 부흥분(추가경정예산 제 1·2호) 관련 잉여금 7,489억엔은 FY2013 예산까지 동일본 대지진부흥특별회계에 편입될 예정임
 2. 계수는 현 단계에서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일본 재무성, 「FY2011 결산 개요(전망)」

■ FY2012 예산집행조사 결과 발표(2012. 7. 3)

- 재무성은 FY2012 예산집행조사 대상으로 한 75건 중 종료된 50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사업 등에 관한 조사 실시 사안 39건, 행정경비 등 관련 부처 횡단적 조사 실시 사안 11건)
- 조사 사안의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개선점, 검토의 방향성 등을 지적,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
-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7월 3일 각 부처에 대해 FY2013 개산요구 및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확실하게 반영하도록 요청

<표 7> 예산집행조사 실시상황(과거 10년)

(단위: 건, 억엔)

조사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사건수	53	59	57	68	62	63	73	100	65	75
내 재무국 조사	2	6	4	11	12	10	15	14	7	16
다음연도 예산 반영액	492	275	260	288	342	324	380	398	109	

출처: 일본 재무성, 「FY2012 예산집행조사 결과 개요」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X

포르투갈

1 예산·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XI

스페인

1 예산·결산 등

- 2014년까지 총 650억유로의 추가 건축 추진(2012. 7. 11)¹⁴⁾
 - 스페인 총리는 하원에서 최근 유럽의회(European Council)에서 합의된 재정목표 및 개혁 이행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개혁 및 건축방안을 발표
 - (재정건축) 부가가치세 인상, 담뱃세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 지출 및 보조금, 실업수당 삭감
 - 정부부처 지출에서 약 6억유로 조정, 정당 및 노동조합 등 보조금 20% 삭감
 - 실업급여 재검토 및 신규 실업수당 수급자 급여수준 60%에서 50%로 삭감
 -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18% → 21%, 경감세율 8% → 10%로 인상
 - 환경과세 개편, 담뱃세 인상, 신규 주택구입자 조세감면 2013년부터 중단
 -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2013~2014년 1%p씩 인하
 - (공공서비스 개혁) 주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 체계 개편으로 효율성 제고하여 약 35억유로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
 - 시장·시의원 임금 표준화, 시의원 30% 축소, 지방 공기업 수 대폭 축소
 - (공공부문 개혁)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 강화, 2차 보너스(second extraordinary salary instalment) 중단, 공기업 및 공공재단 축소 등
- 정부와 지역정부 합의체인 재정정책회의(Consejo de Política Fiscal y Financiera)에서 지역정부의 2013~2015년 재정목표 승인 (2012. 7. 12)¹⁵⁾
 - 2013년 GDP의 0.7%, 2014년 GDP의 0.1%로 적자목표를 수정하고 2015년 GDP의

14)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 (<http://www.lamoncloa.gob.es/IDIOMAS/9/Gobierno/News/index.htm>)

15)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iciasingles.aspx>)

0.2%로 흑자전환에 합의

-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

<표 8> 지역정부(Comunidades Autónomas) 재정목표

	신규 승인 목표	2012년 4월 승인 목표
2013	GDP 대비 -0.7%	GDP 대비 -0.5%
2014	GDP 대비 -0.1%	GDP 대비 -0.3%
2015	GDP 대비 0.2%	GDP 대비 0.0%

■ 스페인 정부, 추가 긴축안 승인 (2012.7.13)¹⁴⁾

-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는 자치지역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재정지원 기금(Regional Funding Mechanism)의 설립을 함께 승인
- 기금은 최대 180억유로 규모로 예상되며, 유동성 지원 대출은 자치지역의 재정긴축안(adjustment plan)의 제출 등 구조조정 조건을 동반

2 기 타

■ 공공부문 개혁으로 연간 63억유로 절감 예상 (2012.7.11)¹⁵⁾

- 베테타(Antonio Beteta) 공공행정 차관은 공공행정위원회(Civil Service Committee)에서 공공부문 개혁 조치와 기대효과 설명
- 휴일(free days) 축소로 일반공공행정(중앙정부) 약 1억유로, 자치지역 약 3억유로, 지방정부 약 1억유로 절감 예상
- 노동조합 전임자(liberados sindicales) 수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여 중앙정부 약 0.5억유로, 자치지역 약 1.6억유로, 지방정부 약 0.4억유로 절감
- 전체 공공부문의 일시적 장애보상 요건 표준화, 공공부문 유연화, 크리스마스 보너스 중단 및 연금기여금 전환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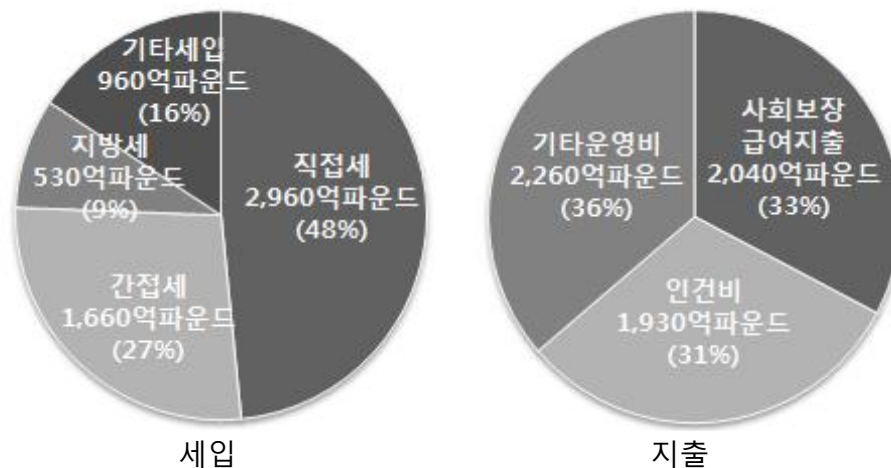
XII

영국

1 예산·결산 등

- FY2010-11 결산요약보고서¹⁶⁾(Whole of Government Accounts: unaudited summary report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1) 발표(2012. 7. 12)¹⁷⁾
- FY2010-11의 공공부문 총세입은 6,113억파운드, 총지출은 6,231억파운드임
 - 순적자(net deficit)는 GDP 대비 7.2%인 1,061억파운드로 전년 1,630억파운드 대비 감소

[그림 3] FY2010-11 공공부문 세입 및 지출 구성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unaudited summary report for year ended 31 march 2011*, chart1.1

- 공공부문 순부채(net liabilities)는 1조 1,951억파운드로 GDP의 80.6%임
 - (자산) 7,100억파운드의 건물, 인프라 등을 비롯해 총 1조 2,264억파운드 규모
 - (부채) 공공서비스연금 순부채 9,595억파운드, 정부 채권 9,082억파운드 등 총 2조 4,215억파운드

16) WGA는 정부의 통합결산보고서로 1,500여 개의 중앙정부기관, 권한이양정부, 의료서비스,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포함함. 추후 감사가 완료된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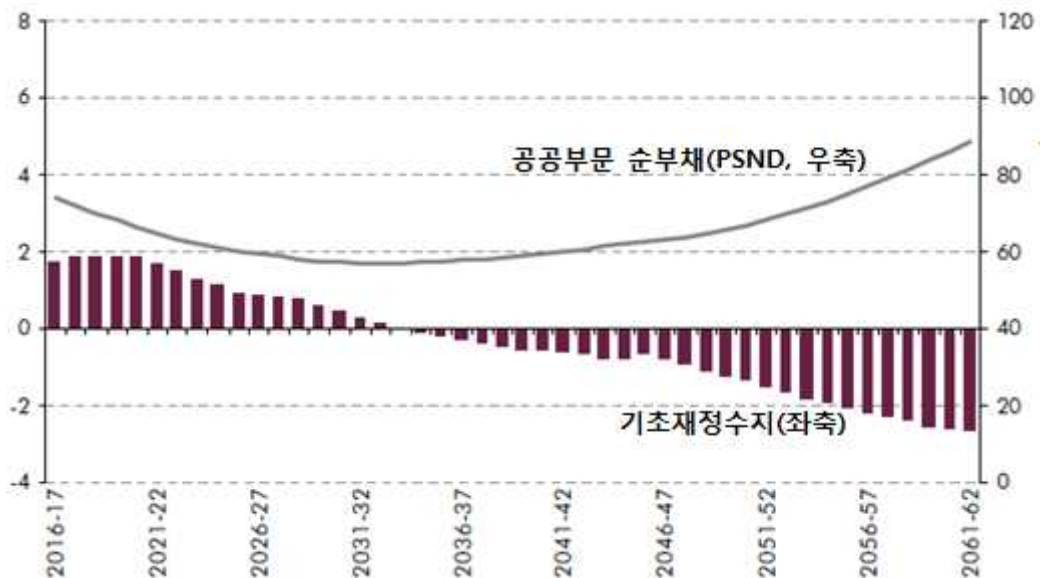
17) 참고 : 영국 재무부 보도자료, 2012. 7. 12. (http://www.hm-treasury.gov.uk/press_58_12.htm)

2 기 타

- 예산책임처(OBR), 재정 지속가능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표(2012. 7. 12)¹⁸⁾
- 공공부문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은 2030년대 중반에 GDP의 57%로 하락했다가 2061~62년에 GDP의 89%까지 증가할 전망
 - 중기건전화계획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그림 4] 기초재정수지 및 PSND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 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2. 7.

- 인구고령화로 건강, 사회보호서비스 등 관련 지출이 2016~17년에서 2061~62년 사이에 GDP의 5.0%만큼 증가할 전망
- 공공서비스 연금 개혁으로 향후 50년간 공공서비스 연금지출을 40%(4,300억파운드) 절감해 GDP 대비 순비용이 2010~11년 1.5%에서 2060~61년에는 0.9%로 하락할 것임

18) 참고 : Fiscal Sustainability Report(OBR), 2012. 7. 12.
 (<http://cdn.budgetresponsibility.independent.gov.uk/FSR2012WEB.pdf>)

- 영국 중앙은행, 양적완화 프로그램 500억파운드 확대 결정(2012. 7. 5)¹⁹⁾
 - 경기 부양을 위해 기존 3,250억파운드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500억파운드 확대해 3,750억파운드로 상향 조정
 - 또한 통화정책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함
- 경기부양을 위한 대출 자금 지원제도(Funding for Lending Scheme: FLS) 도입(2012. 7. 13)²⁰⁾
 -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가계·기업의 은행권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시중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약 800억파운드 규모이며 최대 4년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달 가능
 - 차입비용은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19) 참고 : 영국 중앙은행 보도자료, 2012. 7. 5.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news/2012/066.aspx>)

20) 참고 : 영국 재무부 보도자료, 2012. 7. 13. (http://www.hm-treasury.gov.uk/press_59_12.htm)

1 예산·결산 등

- 미국 의회예산정책처(CBO) 보고서, 2012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 9,050억 달러 돌파(2012. 7. 9)
- (세출) 지난 2011년도 같은 시기에 기록했던 9,710억달러보다는 660억달러 감소된 규모
- (세입) 1조 8,000억원, 지난 2011년도 같은 시기보다 900억달러 증가한 규모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